

# EU Brief

| EU 동향 |

-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상호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필요  
EU needs mutual trust and sense of community to overcome the crisis
- 심상치 않은 유럽의 인플레이션  
Fears over rising EU inflation
- EU와 아랍세계의 민주화  
European Union and democratisation in the Middle East
- EU 시장 진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시기  
Time to plan effective EU market entry strategies
- 금속 가격 상승과 EU의 대응책  
EU's critical raw materials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i.org](http://www.yonse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 EU Focus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상호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필요 ..... 002  
EU needs mutual trust and sense of community to overcome the crisis



## EU Economy

심상치 않은 유럽의 인플레이션 ..... 004  
Fears over rising EU inflation



## EU Politics

EU와 아랍세계의 민주화 ..... 008  
European Union and democratisation in the Middle East



## Trade & Investment

EU 시장 진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시기 ..... 012  
Time to plan effective EU market entry strategies



## Industry Trends

금속 가격 상승과 EU의 대응책 ..... 016  
EU's critical raw materials



## EU Law

EU의 기업활동 규제 강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 022  
EU's control over corporate activity and corporations' response



## Social Issues

긴축전쟁의 사회적 충격: 빈부격차 심화와 계층갈등 ..... 026  
Social impacts of fiscal consolidation and widening income disparity in EU



## Report Review

유럽 재정위기 국가의 부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 ..... 031  
A possible solution to Europe's debt crisis



## EU Centre news

제2회 EU 비즈니스 심포지엄 ..... 033  
The 2<sup>nd</sup> EU Business Symposium

제7회 브뤼셀 포럼 개최 ..... 034  
The 7<sup>th</sup> Brussels Forum

제2회 EU 설문조사 ..... 035  
The 2<sup>nd</sup> Survey on the EU



#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상호 신뢰와 공동체의식이 필요

EU needs mutual trust and sense of community to overcome the crisis

2011년 3월 24일과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 지역 회원국을 지원하는 구제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며, 동시에 유럽의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유럽통합이 지속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하지만 결국 이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구제금융 재원 마련책은 합의되지 못해 또 한 번의 ‘말잔치’로 끝났다는 평가를 들었다. 게다가 4월 7일 포르투갈이 EU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그동안 진정 기미를 보였던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눈앞의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한 EU의 재정지원책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마저 불거져나왔다.

외부의 우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 내 재정우량 국가를 중심으로 더 이상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온 문제국가의 부채를 공동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2011년 3월 말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이 패배하여 58년 만에 다수당의 자리를 내놓는 이변이 발생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유럽 최대의 흑자국이자 유럽공동기금에 가장 큰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독일이 국내의 반발 여론 때문에 유럽안정기금 마련에 더욱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자국의 세금으로 다른 국가의 부채문제를 막아주고 있는 독일에 계속 무조건적인 ‘자비’와 ‘관용’을 요구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독일은 이미 그리

스와 아일랜드의 구제금융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부담하였고, 만약 영구적인 구제금융 지원책이 마련되면 지속적인 재정 출혈이 요구될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내에서는 차라리 유로 지역 단일 화폐를 포기하는 것이 자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유럽통합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유로화 해체는 단순히 단일화폐를 포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일시장을 핵심으로 한 유럽통합의 60년 역사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유로화가 해체되면 현재의 EU 체제 자체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회원국 간에 상호 신뢰가 무너지면 자국이기주의가 부활하고 보호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되어 회원국 간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게 분명하다. 2011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은 유로화와 함께 60년 이상 평화를 누려왔다”고 한 것은 유로화가 유럽통합과 공동운명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60년 역사의 유럽통합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유로화는 경제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출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회원국 모두가 최적통화지역(OCA)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유로화의 운명은 회원국들이 얼마나 강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결속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로화의 위기는 회원국들에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공동체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쩌면 국가주권의 영역에 속하던 재정과 복지 분야에서도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작동될 수 있도록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유로화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회원국 정부의 더 많은 희생과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European leaders gathered in Brussels on March 24-25, 2011 to attend the EU summit. It caught the world's attention as a permanent bailout mechanism was expected to be solidified by the end of the summit. This showed that the current fiscal crisis in Europe was not just a problem of its own, but it also affected the world economy as a whole. The outcome of the summit was also thought that it would affect the speed at which the european integration will continue in future.

However, the summit ended in disappointment as there was no agreement on the permanent bailout package. Investors criticised the leaders for being too slow to act and the financial market was shaken again by Portugal's decision to seek a bailout on April, 7. Currently, the main problem is that EU's bailout packages seem to be a temporary solution to a permanent problem and the size of the fund is likely to be too small if another eurozone country requires help.

The major obstacle is the public opposition in fiscally strong countries such as in Germany to bailing out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being responsible for their reckless fiscal behaviour. In Germany, the ruling Christian Democrats (CDU) suffered an election defeat at the end of March after 58 unbroken years in power in the state of Baden-Wuerttemberg. This even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Germany's attitude towards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und as it will now be even mor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persuade the German public.

It is certainly not fair to ask Germany to use its taxpayer's money to bailout other countries in trouble.

Germany has already contributed the largest amount to the Greek and Portugal bailout packages and it is inevitable that Germany's fiscal position will be eroded if a permanent bailout package is created. For this reason, some even think that it may be better for Germany to give up the single currency and leave the eurozone.

The break up of the eurozone has a more important meaning than just giving up a single currency. It represents the end of the progress towards creating a single market in Europe and along with it, European Union's 60 years of history. The break up of the eurozone will also shake up the institution of the European Union. With the absence of a mutual trust between EU member countries, economic nationalism and protectionism is likely to return.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is facing the most important test of its 60-year long history. The euro was create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of possible economic problems, and it is more accurate to say that it was an outcome of a political agreement. Therefore until the members of the eurozone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optimal currency area, member states' strong sense of community will bind the eurozone together. The current crisis demands a stronger sense of community based on a mutual trust.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it may be inevitable for some member states to sacrifice and this may lay the foundation for fostering an integration process in other areas based on "fair rules of the game" in future. ★





# 심상치 않은 유럽의 인플레이 조심

## Fears over rising EU inflation

As the world economy started to recover from the economic crisis, governments of both emerging economies and advanced economies have started tightening policy to fight inflation. Inflation in advanced countries is rising as their governments have raised the value added tax as a part of their fiscal consolidation plan and also energy prices have been rising rapidly in recent months. Rising inflation has negative impacts on the economy as a whole. It worsens the income distribution and weakens the found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It also worsens the current account balance as it makes imports cheaper and exports less competitive. Inflation in the EU will hurt its economy when it is already suffering from the fiscal crisis. It seems that some EU member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economic recession and rising inflation at the same time and they are likely to experience stagflation in the near future.

### 인플레이션이 EU 회원국으로 전염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최근에는 선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신흥국에서는 1차적으로 꾸준한 자본유입으로 물가 압력이 가중되고 수요가 높아져 가격이 상승하는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했다면, 선진국에서는 긴축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인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주로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EU에서도 역시 비슷한 이유로 물가상승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기 대비 2.7%를 기록해 지난 2월(2.4%)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ECB의 통제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치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1월에 6.1% 상승하며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

### 회원국별 물가상승 현황

EU 회원국 중에는 루마니아의 물가상승률(7.6%)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루마니아가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긴축조치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19%에서 24%로 5%p나 인상했기 때문이다.<sup>1</sup> 부가가치세 인

<sup>1</sup> IMF는 루마니아에 200억 유로의 국제금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 ★ 2011년 2월 유럽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HICPs)

(단위: %)

구분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 대비)
독일	2.2
프랑스	1.8
영국	4.4
이탈리아	2.1
스페인	3.4
포르투갈	3.5
그리스	4.2
에스토니아	5.5
루마니아	7.6
불가리아	4.6
유로지역 평균(3월)	2.6
EU 평균	2.8

자료: Eurostat.

상으로 루마니아의 재정수입은 약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6.25%로 6개월째 동결했다. 이는 목표치인 4.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서유럽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영국의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로, 이는 영란은행(BOE)의 연간 물가억제 목표치인 2%의 2

배를 웃돈다.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도 “올해 물가상승률이 4~5%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물가상승의 주 원인은 재정긴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상 때문이다(중전 17.5%에서 20%로 인상). 게다가 영란은행은 3월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4개월째 0.5%로 동결했다. 물가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재정긴축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일례로 지난 3월 26일 런던에서는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25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반대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920년대 초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험 때문에 유난히 물가에 민감한 독일에서도 물가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연합통계청은 독일 물가가 2010년 12월 1.9%, 2011년 1월 2.1%, 2월 2.2%를 기록해 3개월 연속으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 에너지 가격이 물가상승을 견인

최근 EU 회원국의 물가상승은 MENA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연초 대비 15% 상승), 식품 가격 상승, 긴축조치의 일환인 부가가치세 인상, 임금 인상(독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회원국 전체의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2월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년동월 대비 13.1%에 이른다.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 기초인플레이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에너지가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주목할 점은 2010년 겨울 유럽을 강타한 한파에 이어 중동의 민주화사태가 유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북해산 브렌트 원유는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에너지 약세장에서 90달러를 돌파했다. 한파 이후에 발생한 MENA 지역의 불안으로 고유가 국면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브렌트 원유는 118.64달러에 거래되고 있

### ★ 항목별 인플레이션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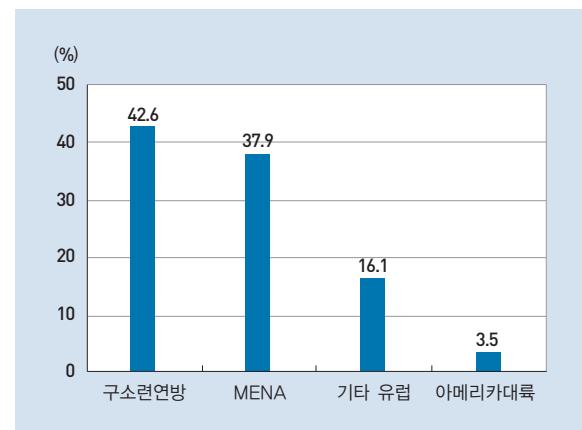
구분	전년 동월 대비
식료품	2.0
주류 및 담배	3.5
의류	-2.6
주거	4.9
교통	5.7
통신	-0.4
문화	0.0
에너지	13.1

자료: Eurostat.

다(2011년 4월 1일 기준).

중동발 유가 상승세는 EU의 대중동 원유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EU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U 27개국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비중은 전체 원유 수입의 37.9%인데, 이는 구소련연방에서의 수입(42.6%)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sup>2</sup> 개별 수출국 중에는 러시아(29.6%)

### ★ EU의 원유 수입비중



자료: 김위대 (2011). “유로존 국가들의 고유가 민감도 분석.” 국제금융센터에서 재인용.

<sup>2</sup> 김위대 (2011). “유로존 국가들의 고유가 민감도 분석.” 국제금융센터.





가 가장 많고, 노르웨이(20.9%), 리비아(10.2%), 카자흐스탄(6.1%), 이란(6.0%) 순이다. 특히 리비아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는 아일랜드(23.3%), 이탈리아(22%), 프랑스(15.7%), 그리스(14.6%), 스페인(12.1%) 다음으로 높다. 만약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되면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부 회원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득분배의 악화를 꼽을 수 있다. 서행적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모든 소득은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하지만, 더 큰 이득을 얻는 수취자가 생겨난다. 주로 손해를 입는 계층은 고정 연금, 정부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고정 명목이자 수입을 받는 사람, 생활비가 상승하였으나 수입을 상환할 수 없는 봉급생활자 등이다. 특히 EU처럼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크다. 노년층은 대체로 고정 연금, 소규모 저축, 채권 보유 등을 기반으로 생활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경기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각 경제주체-채권자, 채무자, 저축자-의 경제적 입장이 변화한다. 대출자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 채무자는 채무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득을 본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흐름(flow)으로서의 소득재분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장(stock)으로서 부의 재분배도 가져온다. 정부는 언제나 큰 이득을 보며, 민간부문에서는 젊은 층과 중간소득층이 주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저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대출재원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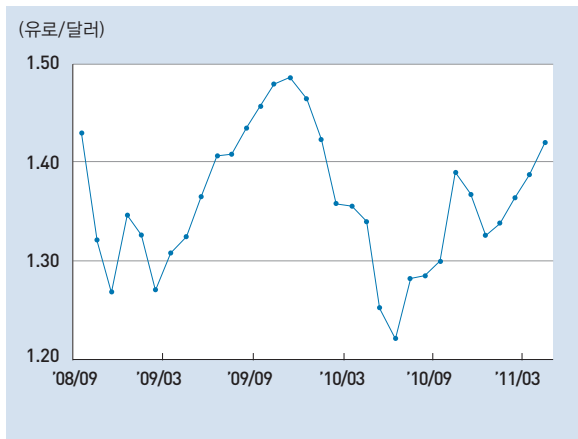
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기업 역시 직접생산 활동에 투자하기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특히 물가상승의 속도가 매우 빠를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넷째, 국내의 인플레이션은 수입을 유발하고 수출을 어렵게 만들어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특히 물가상승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거나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빠를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국내 물가가 오르면 해당 국가의 상품이 외국 상품에 비해 더 비싸지므로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은 잘 되지 않고,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물가상승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림으로써 경상수지의 악화를 초래한다.

이처럼 재정위기로 침체에 빠져 있는 EU 경제에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몇몇 EU 회원국에서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많은 회원국들이 현재 '유사 스태그플레이션'<sup>3</sup>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강도의 재정긴축이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경향이 뚜렷하다. 2011년 2월 4%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영국은 2010년 4/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6% 감소하기까지 했다. 한파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0.5% 성장이었다는 점에서 경기가 예상 밖으로 빠르게 식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위기를 겪는 그리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1년 그리스의 성장률은 -3.0%로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 물가상승률은 EU 지역에서 에스토니아(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4.2%를 기록했다. '성장 없는 고물가'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sup>3</sup>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극심하지는 않고, 성장도 부진하지만 침체에 빠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 유로화 환율 변동 추이



주: 2008년 9월~2011년 4월(월평균)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 EU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

이러한 '성장 없는 고물가'의 흐름 속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어 EU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우려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자니 치솟는 물가를 잡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구체적으로 EU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첫째, 갑작스러운 금리인상은 남유럽 국가의 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국채금리가 상승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역내 재정 위기국가의 자본 조달 비용이 늘어나 국가부도 위험이 커진다.

둘째, 금리인상으로 유로화가 상승세를 이어가면 회원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도 예상된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이미 유로화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유로당 1.42달러, 2011년 4월 4일 기준).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기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24개월 동안이나 1%의 최저금리를 유지하던 유럽중앙은행도 금리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정위기로 펀더멘털이 취약해진 회원국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면 연말까지 한두 차례 0.25%p씩 추가 인상도 예상해볼 수 있다.

####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 각국의 중앙은행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

금융위기 직후 초저금리·유동성 공급이라는 부양책을 고수하면서 공조했던 주요 회원국의 중앙은행이 각국의 물가상승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을 함으로써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일본은행(BOJ)은 4월 7일 일제히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서로 다른 세 가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일본은행은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반해 영란은행은 정책기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러한 각국 중앙은행의 '제 갈 길 가기'가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EU와 아랍세계의 민주화

## European Union and democratisation in the Middle East

Europe has set the realisation of widely accepted normative value as its major diplomatic goal and it seeks a solution to international political problems through both unilateral and multilateral international negotiation. As the EU uses its considerable soft power, its diplomatic strength does not lie in its military force, but rather it is based on its normative value-driven external policy. If so, what kind of policies and stance has the EU been taking since the turmoil in the Middle East began? If the crisis in the Middle East continues, it will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EU economy and the number of immigrants to European countries will start to increase. As a result, it seems that EU's current policy towards the Middle East does not seem to be based on its normative value, but rather the realisation of its economic benefits has become a priority in its strategy.

### 유럽의 최대 관심사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중해 이남의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할 것만 같던 30~40년 묵은 독재정권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국제사회의 개입에 이슬람권 갈등까지 더해져 사태 해결은 날로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중해 남쪽 연안은 유럽에게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의 원천이자 교역과 투자 파트너, 원조의 대상이자 이민 문제의 집중 관리 대상일 뿐만 아니라, 9·11 이후에는 대테러정책 수행 차원에서도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은 유럽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지중해 건너편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유럽은 전통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의 추이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정치적 난쟁이에서 국제정치의 유력 행위자로

EU는 경제규모와 교역규모 면에서 모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여타 거대 경제권을 앞지르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거인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난쟁이라는 조롱을 받아왔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재임 당시 유럽의 외교적 무력성과 분열성을 빗대 “유럽에 전화를 하려면, 도대체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거요?”라는 조소를 던졌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sup>1</sup> 냉전 당시 독자 안보능력을 결여한 채 철저히 미국에 의존했던 이러한 유럽의 상황은 ‘참을 수 없는 유럽의 가벼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sup>2</sup>

유럽의 대미 안보 의존은 탈냉전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유럽 국가에게 안보 함의가 클 수밖에 없는 걸프전쟁과 유고슬라비아 사태 등 이른바 유럽의 근린 지역<sup>3</sup>에서 벌어진 분쟁에서조차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걸프전쟁에서 유럽은 미국이 탈냉전시대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다국적군을 이끌고 사태 해결을 주도하는 걸 지켜보는 보조자 역할에 머물렀다. 보스니아 사태에서는 전쟁 당사자들 간의 평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무기력함만 노출하였고, 결국 미국의 군사개입에 힘입어 데이턴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자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삽입된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이

<sup>1</sup> 키신저가 던진 질문의 영어 원문은 “If I want to call Europe, who do I call?”이다.

<sup>2</sup>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원래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가 1984년에 발표한 소설의 제목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패러디한 것이다(What is Europe? (2004. 12. 17.), *The Guardian*, <<http://www.guardian.co.uk/world/2004/dec/17/eu.turkey1>>).

<sup>3</sup> 유럽의 근린 지역은 원래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EU가 구성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동유럽과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만을 의미하였으나, EU가 중동구권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로루시 등의 구소련 국가들,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국가들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도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생쥐의 포효’에 불과하다는 조롱을 받았고, ‘공동외교안보정책’이 아니라 “비공동외교안보정책(Europe's uncommon foreign policy)”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들었다.<sup>4</sup> 외교안보 문제에서 유럽은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난쟁이였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정치에서 EU는 비중 있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였고, 근린 지역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5</sup> 이러한 EU의 부상은 군사력 강화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유럽이 추구하고 또 대변하는 규범적 가치에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규범세력으로서의 EU

유럽의 힘은 유럽이 추구하는 외교정책 목표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외교정책 도구의 차별성에서 비롯된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에 장애가 되는 문제는 무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반면, 유럽은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의 구현을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 상정하여 연성권력과 외교협상, 다자주의적 국제기구의 통로를 활용하여 해법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6</sup>

외교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은 군사력이라는 전통적 관점에 따르면 유럽은 실질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난쟁이’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U 회원국이 안보와 국방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EU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 주권을 이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탈냉전 이후

발생한 이른바 평화 지분(peace dividend)을 포기하지 않는 한 EU가 군사력을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범적 설득력이 힘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EU의 외교를 단순히 ‘말잔치(talk shop)’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기는 어렵다. EU 외교정책의 자산은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향상 같은 보편적 가치에 역점을 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군사력이 아닌 문민적 외교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가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제정치에서 유럽의 영향력은 규범적 가치를 설정하는 능력과 권위에서 비롯된다. 더욱이 유럽은 기존 강대국의 외교행태와는 달리,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경제적 도구와 외교적 협력, 다자주의적 국제기구를 활발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배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은 ‘규범세력’(normative power)<sup>7</sup>으로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규범세력은 전적으로 규범적인 목표만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다. 규범세력도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며 합리성의 토대에서 손익을 계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규범세력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할 때에도 자신이 설정한 규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물질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취하는 조치 또한 규범적 관점이 규정한 ‘적절한 행동양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EU가 규범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예는 많다. 무엇보다도 EU 회원국은 인권과 법치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환경문제의 해결

<sup>6</sup> 미국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의 일방주의적 강경 외교노선과는 크게 다른 외교정책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군사력보다는 다자주의적 기구 활용에 보다 적극적이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전 세계의 약 50%에 달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언제라도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활용한 외교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구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sup>7</sup> 외교정책의 주체가 보편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는 가치의 수호와 확산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목표가 상정한 가치에 위배되지 않을 때 규범세력이라 할 수 있다.

<sup>4</sup> Gordon, P. H. (1997). Europe's Uncommo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2(3), 74-100.

<sup>5</sup> Sjursen, H. (2006). What Kind of Power?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3(2), 169-181.; Bichi, F. (2006). Our Size Fits All: Normative Power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3(2), 286-303.





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즉 국제정치에서 EU는 규범적 가치를 실현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EU와 아랍세계의 민주화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랍세계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 EU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가? 특히 국제사회의 개입이 시작된 리비아 사태에 대해 EU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리비아 사태가 민주화 시위에서 내전으로 치달으면서 정부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나자, 2011년 3월 21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 정부군에 대한 군사공격을 허용하는 「결의안 1973호」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EU는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전투수행을 포함하는 군사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EU는 역외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EU의 군사적 역할은 대부분 평화유지에 국한되며 본격적인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EU의 군사력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EU가 국제 분쟁지역에서 군사작전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회원국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인이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유럽주의(Europeanism)’를 옹호하는 프랑스 같은 국가는 EU의 군사력이 강화되기를 원하지만, 미국과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NATO를 유럽의 주된 안보 기제로 삼아야 한다는 ‘대서양주의’를 주창하는 영국 같은 나라는 EU의 군사력 확대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독자적인 군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도 EU의 군사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군사안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도 군사 부문의 예산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010년 11월 영국과 프랑스가 국방협약을 맺어 핵무기 개발과 항공모함 운용능력을 공유하기로 한 것은 고가의 첨단무기를 구비하는 데 부담을 느낀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sup>8</sup> 결국 EU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군사력의 구축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EU는 군사능력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리비아 사태에서 규범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물고 있다. EU 이사회는 카다피 정권이 자행한 리비아 국민에 대한 폭력 행사와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아울러 리비아 시민의 보호와 리비아의 민주화가 EU의 대리비아 정책의 주된 목표라 천명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리비아 결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UN과 NATO, 아랍권과의 협조하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시민보호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EU는 2011년 4월 7일 현재 8,619만 유로의 예산을 조성하였으며, 국제구호기구와의 협의를 진행시키면서 리비아 내의 EU 시민과 제3국 시민의 철수를 위한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리비아 사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의지를 가진 프랑스와 영국은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NATO는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결국 군사개입 능력을 결여한 EU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다른 주요 안보행위자와 연계하여 규범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리비아를 비롯한 지중해 이남 지역의 민주화 과정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 규범적 원칙보다는 이익 실현이 최우선

EU가 규범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지만, 그동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규범적 가치의 확산에 적극적이지

<sup>8</sup> A force for good. (2011. 3. 26.). *Economist*.  
<<http://www.economist.com/node/18440961>>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 EU 회원국의 농업과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해관계, 이민유입 통제 필요성 등 EU 회원국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이 지역에 얽혀 있기 때문에 정치발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중해 이남 국가가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일부 EU 회원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 행렬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민문제에 대한 EU 회원국의 태도는 지중해와의 거리의 원근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측은 바로 이런 관점을 대변한다. 지중해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일수록 이민문제에 대해 이상주의적이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가까운 국가일수록 현실적이고 때로는 비인도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sup>9</sup> 그래서 EU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해 경제문호를 제한적으로만 개방하는 가운데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안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지중해 이남에서 민주화 운

동이 시작되었을 때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EU는 유럽의 지척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UN보다 반응이 늦어 UN 결의안이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사태 초기 일부 주요 회원국 정부는 기존의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정권 붕괴가 거의 확실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EU와 회원국의 입장이 반독재 친민주로 선회하였으며, 리비아 사태 때는 이러한 뒤늦은 각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카다피 퇴진과 민주화를 더욱 강경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전개를 고려해볼 때 EU의 대 중동·북아프리카 정책이 전적으로 규범적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원국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에서는 가치의 구현보다는 이익 실현이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정확한 관찰일 것이다. ★

최진우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up>9</sup> Living with bad neighbours. (2011. 3. 5.). *Economist*, p.58.

# EU 시장 진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시기

## Time to plan effective EU market entry strategies

Korea's trade relations with the EU will experience major changes in 2011 as the Korea-EU FTA enters into force on July 1, 2011 and trade tariffs start to come down. The European market has been affected by the economic crisis as it had impacts on people's shopping behaviour and it has also been affected by the fiscal consolidation. It will be vital to understand these changes in order to succeed in the EU market when the FTA comes into force. Korean firms must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n the process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and the outsourcing strategy of Europe's global corporations. It will be important to develop market entry strategies by taking changes in consumption behaviour into account. Also, Korean firms should be prepared for Europe's expanding green industry and the wind power sector in particular. They should collaborate with European firms through technology sharing and co-investment in R&D and product development.

### FTA 발효로 대EU 무역환경 변화

2011년은 한국의 대EU 수출환경이 급변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EU가 2007년부터 협상을 추진해온 FTA가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수출환경의 구조적 지형이 바뀔 수 있고, EU 시장 자체도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FTA 발효는 한국의 현재 점유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EU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19%에 근접하는 중국, 4%대의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철폐로 한국기업은 EU의 역내 기업과 가격 면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고,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기업에 비해 최소 3년 동안 수입 관세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U 27개국의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미국의 2배, 중국의 3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 3조 달러 정도인데, 이러한 거대 수입시장이 한국기업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약 8,500개 품목의 관세가 100%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호적인 여건은 차차 시차를 두고 발생하겠지만,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발효 초기에 시장을 적극 공략해 초기 선점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

FTA만으로 그동안의 한국기업의 열세를 뒤집기에

는 역부족이다. 특히 EU의 시장과 산업은 역내에 수직계열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역외 기업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특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원활한 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불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 없이는 FTA 혜택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유럽 재정위기는 한국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편, 한국기업의 EU 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짜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후폭풍으로 급변한 EU 시장의 환경 변화다. 이런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위기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8년 9월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여파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각국이 경제 활성화 대책(stimulus package)을 통해서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남부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해 유럽 경제에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0년 5월 10일 EU와 IMF가 7,500억 유로에 달하는 금융시장 안정 메커니즘 구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유동성 위기는 감소하였으나, 시장의 불안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실패해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재정위기가 재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는 EU 회원국의 정부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소비자 구매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제주체들이 생존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위기 극복을 위한 전 방위 노력

우선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세원 확대 노력을 전 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건전화 노력은 재정위기를 겪은 남부유럽 4개국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교적 재정상황이 양호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서부유럽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가 2009년 GDP의 13.6%에 달하였던 그리스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300억 유로의 정부재정을 축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너스 지급을 중단하고, 부가가치세를 19%에서 23%로 인상하였다. 포르투갈도 특별소비세, 부가세, 법인세를 인상해 세원 확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 실행 중이다. 남부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서부유럽 국가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독일은 연금수령을 제한하고, 영국은 각료의 급여를 삭감, 동결하는 등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60억 파운드의 정부지출을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도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에서 예외일 수 없다. EU 기업은 불요불급한 비용의 절감,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비용절감 3개년 계획을 추진 중인 프랑스의 PSA 푸조-시트로엥사는 2009년에 33억 유로의 비용 절감에 성공해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토털사는 수익성 낮은 사업을 매각하고 전략적 제휴와 지분 참여를 통해서 2010년에 103억 유로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기업도 정부지출이 활발한 중국, 미국 등지로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이전 중이며, 해외기업과의 M&A, 핵심 기술 보유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기업은 독일다운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R&D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완성차 업체는 앞으로 4년간 사상 최대 규모인 120억 유로의 해외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독일의 자동차 생산규모는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위기 이후 소비 패턴도 변화

한편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줄이는 대신, 가정에서 실속 있게 즐기는 소위 '호밍(hom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제품을 선호하고 중고품의 구매도 마다하지 않는 '좋은 소비(better consumption)'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지역사회나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이나 공정거래(fair trade)를 하는 기업의 상품 구매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고, 동일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 쇼핑물의 연 매출이 25%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의류 구매나, 항공여행에서 시작된 저가소비(low cost) 움직임이 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상품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의 소비자들도 과거 첨단기능을 갖춘 비싼 일본 제품을 선호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품질이 우수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저가, 실속형 구매 패턴이 일반화되고 있다.





EU 시장의 이러한 동태적 변화는 일시적・단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볼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시장, 산업, 교역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EU 시장 공략을 위한 6가지 전략

이러한 EU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한-EU FTA 발효는 한국기업에게 기회와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거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 ❶ 공공부문 조달시장 변화에 주목

첫째, 한 톨이라도 비용을 줄이려는 공공부문의 구매 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EU의 공공부문 조달시장 규모는 총 GDP의 17.2%인 2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독일, 영국, 프랑스 3국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유럽 지역에는 현재 450여 개의 크고 작은 공항과 1,300여 개에 달하는 항만이 있는데, 오랫동안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 관계로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교통 인프라 시설이 많다. 그래서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EU의 공공부문 조달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는데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발주자와 신뢰 구축, 현지 기술규격과 인증 준수, 현지 A/S와 물류공급시스템 확충 등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미지의 영역인 EU의 공공부문 조달시장을 노크해야 한다.

##### ❷ EU 글로벌기업의 아웃소싱에 대비

둘째, EU 글로벌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outsourcing)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웃소싱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약 5,000억 달러에 달하고 『포천(Fortune)』의 1,000대 기업 가운데 95%가 글로벌 아웃소싱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의 글로벌기업도 한국기업을 아웃소싱 대상으로 보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세계적 자동차기업인 벤츠, 아우디, GM-오펔을 비롯해 프랑스의 PSA, 이탈리아의 피아트 자동차가 한국산 부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EU 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 외에도 전력기자재, 풍력발전기,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한국산 부품과 소재의 글로벌 아웃소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기업의 공급사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급하고자 하는 타깃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망된다. 우선 대상 기업의 납품업체 평가 기준인 품질 안정성, 기술 혁신성, 상호 커뮤니케이션, 경쟁력 높은 가격, 적시 공급능력, 장기 성장 가능성 등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폭스바겐사는 이외에도 독일어 구사 직원, 독일 거주 기술자 보유, EU 내 생산공장 운영 여부에 따라 가산 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

##### ❸ 소비행태 변화에 주목

셋째, 단순한 소비행위에서도 환경보호와 실속, 경제성을 모두 고려하는 소비자의 더욱 현명해진 소비행태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소비자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구매를 늘리고, 동일 제품이면 공정거래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등 사회생활까지도 가정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영화를 대체하는 대형 텔레비전 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외식을 줄이면서 에너지 절감형 오븐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장의 세분화와 차별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확실하게 세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디자인과 품질을 바탕으로 고급 백화점에서 고소득층을 공략하는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가거나, 반대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면 유통자상품

부착상품(private label, pl) 제품시장으로 특화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EU의 PL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행태를 보이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 ❹ 녹색산업의 성장 기회 모색

환경보호라는 테마를 세계 최초로 규범화하기 시작한 EU와 함께 그린산업의 성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2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태양광발전 설비의 80%, 풍력발전 설비의 40%가 유럽에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로스앤라우(독일), 센트로섬(독일), 올리콘 솔라(스위스), 베스타스(덴마크), 에너콘(독일), 지멘스(독일)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과 협력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특히 육상 풍력산업의 성장 정체에 따른 대안으로 영국, 덴마크, 독일을 중심으로 해상 풍력산업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2030년경에는 EU의 발전규모가 150GW에 이를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 ❺ EU 기업의 역외 협력 활용

다섯째, 전 세계적으로 경쟁의 일상화가 진전되면서 개방형 혁신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IT, 제약 분야의 EU 기업도 핵심 기술을 제외하고는 기술 이전, 공동 R&D, 상품개발 등에서 역외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이 저품질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EU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서 일거에

산업과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변신하는 사례(역마르코폴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❻ 낙후지역의 인프라 개선 시장에 진출

마지막으로, EU가 3,500억 유로의 기금을 배정해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낙후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환경 및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1993~2009년 동안 유럽개발은행(EBRD)의 동유럽과 CIS 개발 프로젝트는 총 3,415건에 달하였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이런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총 8건(2,500만 유로)에 그쳐 전체 발주 프로젝트의 불과 0.2%만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우선적으로 유럽 중동구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 소각로와 같은 중소 규모의 환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EU FTA 발효와 EU 시장의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준비 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한 해는 한국기업이 이와 같은 전략을 여건과 형편에 맞추어 집중 추진함으로써 이제까지 한국이 EU 시장에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열세를 보였던 상황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과 EU가 21세기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해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윤재천 KOTRA 지역조사처장





# 금속 가격 상승과 EU의 대응책

## EU's critical raw materials

The price of raw materials has been rising rapidly since 2009 as the demand has been increasing in emerging economies. The EU's import dependence on metals and strategic materials is very high and its industrial competitiveness could be affected if the supply is disrupted. The EU Commission has identified 41 critical minerals and metals based on current geopolitical-economic environment. The use of new technologies and the growth of new industries will affect the supply and demand relationship of key materials and the access to such critical raw materials will determine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many industries. The EU has proposed trade disciplines on export restrictions in various types of negotiations and it is using the WTO dispute settlement to solve trade problems related to raw materials. It is also taking steps to improve its knowledge base on deposits of raw materials. The EU must strengthen the Waste Shipment Regulation and find ways to support its urban mining and recycling business in order to foster sustainable supply and to boost resource efficiency.

###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 EU의 금속 수입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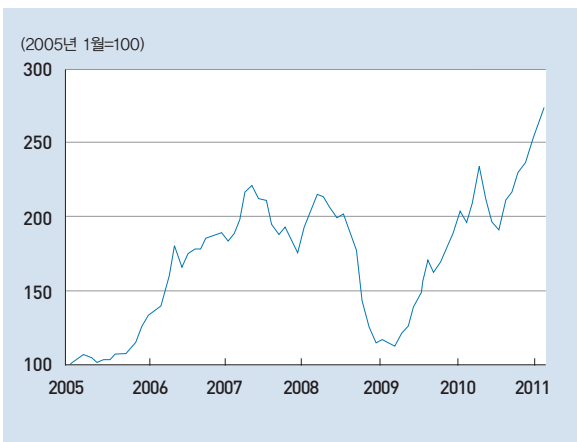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금속 가격은 2000년대에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9년 초에는 2005년 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9년 3월부터 금속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불과 14개월 만에 2007년 5월에 기록한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이는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가운데 특히 신흥국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2011년 중국과 인도가 각각 9.6%와 8.4%의 고속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신흥국에서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내구소비재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금속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흥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프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지표도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2011년 금속 수요는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금속 수입의존도<sup>1</sup>가 대부분 50%를 상회하고, 특히 철강은 85%로 매우 높다. 그래서 EU 기업들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다. 결국 EU의 원자재 확보

<sup>1</sup> 순 수입/(순 수입+EU 생산량)

### ★ 금속 가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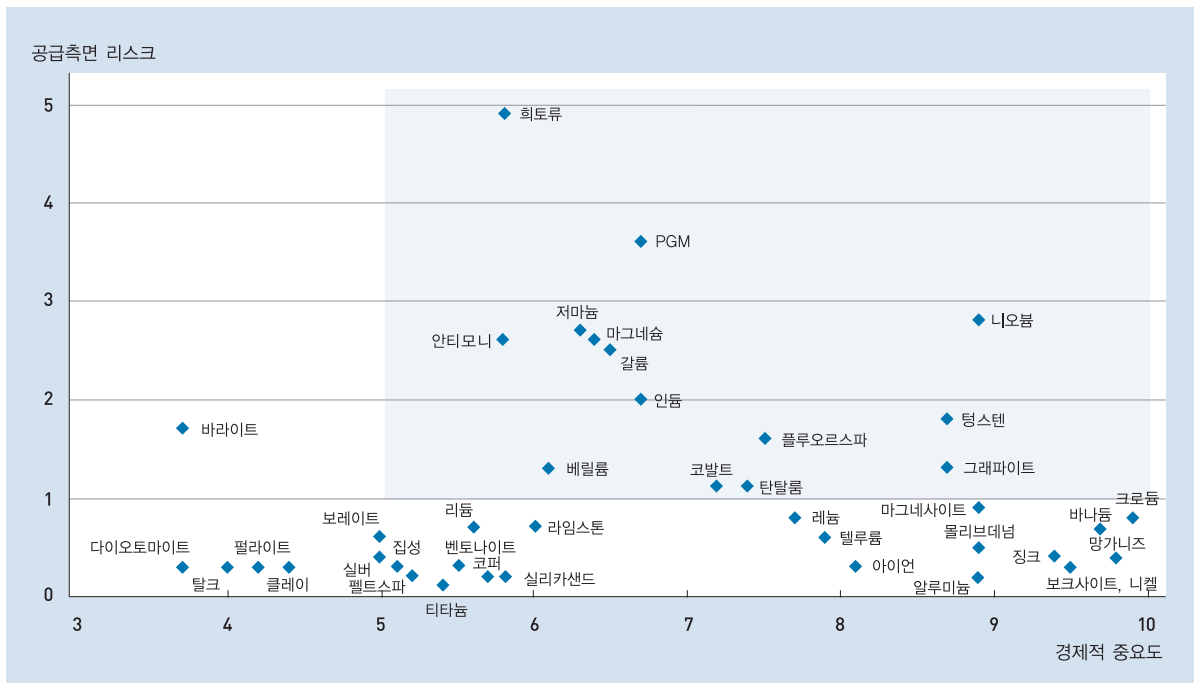
주: 구리, 알루미늄, 철강, 주석, 니켈, 아연, 납, 우라늄 가격에 세계 수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자료: IMF, Primary Commodity Prices.

역량이 EU의 제조업체와 신성장 동력인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 EU의 14개 희소 금속

EU 집행위원회는 41개 금속에 대한 공급측면 리스크와 경제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14개 희소 금속(critical raw materials)을 선정하였다. 생산국 집중도, 생산국 거버넌스 수준, 금속 대체 가능성, 재활용률을 종합하여 공급측면 리스크를 분석하였고, 경제적 중요도는 산업규모 비중과 금속 소비량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 ★ EU의 14개 희소 금속



주: 희토류는 17개, 플래티넘 그룹은 6개 금속으로 구성  
자료: EU 집행위원회 (2010), Critical raw materials for the EU.

EU 집행위원회가 선정한 14개 희소 금속에 대한 EU의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수입국이 주로 개발도상국인 것이 특징이다. 이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수입의존도가 100%에 달하는 마그네슘의 경우 중국이 그중 82%를 차지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선정한 희소 금속은 바라이트를 제외한 26개 금속들보다 공급측면 리스크가 더욱 높고 구리, 리튬, 티타늄 같은 금속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와 플래티넘 그룹이 공급측면 리스크가 가장 높고, 니오븀, 텅스텐, 그래파이트의 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니오븀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측면 리스크 또한 높다. EU는 브라질과 캐나다에서 각각 총 니오븀 소비량의 84%와 16%를 수입하였다. 약 90%의 니오븀이 고강도저합금(HSLA)강을 생산하기 위해 철강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생산된 고강도저합금강은 주

로 드릴 기구나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용 관을 만드는 데 쓰인다. 약 10%는 원자력 산업과 항공기 산업에서 초합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 중요도가 두 번째로 높은 텅스텐은 60%가 초경합금, 13%가 합금강, 6%가 초합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파이트는 24%가 주조공장 및 철강 산업에서 사용되고, 15%가 도가니 생산, 12%가 전기기구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텅스텐과 그래파이트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각각 73%와 95%로 매우 높다. 그러나 텅스텐은 재활용률이 높고 몰리브덴과 우라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파이트는 세계 매장량이 현재 생산량의 63배 수준에 달하여 공급측면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신기술 개발로 인한 금속 수요 증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신성장 산업이 부상하면 희소 금속의 중요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가 미래 유망 기술 32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생산량으로는 2030년에 발생할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금속생산량 대비 신기술 관련 국제수요를 비교해보면 2006년 기준으로 인듐과 탄탈륨이 40%로 가장 높다. 2030년에는 신기술 개발로 인하여 6개 금속에 대한 수요가 현재 생산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기준 신기술 관련 갈륨 수요는 총 생산량의 18%에 불과하였지만, 2030년에는 397%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듐은 40%에서 239%, 게르마늄은 28%에서 220%, 네오디뮴(희토류)은 23%에서 166%, 플래티넘은 0%에서 135%, 탄탈륨은 40%에서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륨은 광전지와 백색 LED, 인듐은 광전지와 디스플레이 생산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게르마늄은 섬유-광케이블 생산과 적외선 광학기술, 플래티넘은 연료전지와 촉매제 생산으로 인하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친환경 산업에서 금속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면서 친환경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코발트, 리튬,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의 EU 기업이 친환경 산업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베스타스(덴마크), 에너콘(독일), 가메사(스페인)는 세계 풍력발전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오스람(독일)과 필립스(네덜란드)는 조명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EU의 자동차 기업들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11년 3월에 아우디 그룹(독일)은 2010년 매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354억 유로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제품 및 기술 개발, 생산설비 개선 등에 116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up>2</sup> 그리고 이 가운데 약 95억 유로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투입될 것

<sup>2</sup> Audi Group: Best result in corporate history. (2011. 3. 8.). 폭스바겐 홈페이지.

#### ★ 친환경 기술 분야별 희소 금속 수요

구분	풍력발전	자동차		조명
	모터자석	모터자석	건전지	형광제
희토류	란타넘		●	●
	세륨		●	●
	프라세오디뮴	●	●	●
	네오디뮴	●	●	●
	사마륨	●		
	유로퓸			●
	테르븀			●
	디스프로슘	●	●	
	이트륨			●
	리튬		●	
	코발트		●	

자료: 미국 에너지국 (2010), Critical Materials Strategy.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희소 금속을 주로 신흥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EU 기업들도 공급 불안으로 인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 희토류 수급 불안정과 통상 마찰

EU는 핸드폰, 텔레비전 같은 주요 전자제품과 첨단 무기 생산, 미래 유망 기술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희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U의 총 수입량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90%와 9%를 차지한다.

2009년에 중국은 세계 총 희토류 생산량의 95% 이상을, 세계 총 매장량의 36%를 차지하였다. 러시아와 CIS 국가들이 총 매장량의 19%를, 미국과 호주가 각각 13%와 5%를 차지하고 있다. 1984년까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희토류를 생산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낮은 임금을 앞세워 철강을 비롯한 금속생산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자 가격 경쟁에서 신흥국에게 밀려 2002년에 희토류 생산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희토류 가격이 상승하자 미국은 2010년 12월부터 다시 소량의 비축물을 재가공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희토류를 비롯한 여러 금속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 ★ 세계 희토류 수요와 중국의 수출 쿼터

(단위: 톤, %)			
연도	중국 제외 세계수요	중국의 수출 쿼터	전년대비 감소 폭
2005	46,000	65,609	-
2006	50,000	61,821	-6%
2007	50,000	59,643	-4%
2008	50,000	56,939	-5%
2009	25,000	50,145	-12%
2010	48,000	30,258	-40%

자료: 미국 에너지국 (2010), Critical Materials Strategy.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난하였다.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 쿼터 감소 폭을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2011년 상반기 수출 쿼터를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한 1만 4,446톤으로 책정하였다.

EU는 2009년 12월에 멕시코, 미국과 함께 중국의 금속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하였고 2011년 3월 WTO는 중국의 통상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대외비 판정을 내렸다.<sup>3</sup> 4월에 공식 발표될 최종 판정 결과가 이 예비 결과와 동일하면 중국은 금속 수출규제를 즉시 완화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규제 완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통상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불어 지난 2011년 2월 원자바오 총리는 희토류 사업 재정부비 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향후 중국정부가 불법 채굴 단속과 환경보호 기준 등의 희토류 채굴 규정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sup>4</sup>

희토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기업들은 희토류 확보를 위하여 해외 광산 지분

<sup>3</sup> WTO opens China to rare earth challenge. (2011. 3. 3.). *EurActiv*.  
<sup>4</sup> China could become net rare earth importer by 2015-Molycorp. (2011. 3. 10.). *Reuters*.

을 사들이고 있다. 2011년 3월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등 한국과 일본의 기업 컨소시엄이 브라질 희토류 광산에 약 18억 달러를 출자하여 지분 15%를 확보하였다.<sup>5</sup>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선진국은 광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5년 내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각각 3곳, 2곳, 1곳의 광산이 희토류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경우 아프리카의 경제통합, 수출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아프리카-EU 공동전략 2011-2013’을 통하여 기업의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르노자동차(프랑스)의 필립 솔츠 에너지·원자재 전문가는 현재 희토류 가격 상승이 생산국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sup>6</sup>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희토류 매장량은 약 9,900만 톤으로 2010년 생산량<sup>7</sup>의 778배에 달한다. 또한 2015년까지 새롭게 개발될 광산에서 2010년 생산량의 48% 수준인 6만 657톤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스프로슘, 유로퓸, 테르븀은 2015년에 추가 생산량이 200톤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네오디뮴은 추가 생산량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친환경 산업에서 수요가 급증하여 당분간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하여 기업은 희토류의 대체원료와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금속 수급 안정화를 위한 EU의 정책

EU는 2008년에 발표한 원자재 이니셔티브<sup>8</sup>에 명시되어 있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여 역내 원자재 공급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sup>5</sup> Japan and S Korea groups take rare metal stake. (2011. 3. 3.). *Financial Times*.  
<sup>6</sup> Automakers worried about metals, not rare earths. (2011. 3. 4.). *EurActiv*.  
<sup>7</sup> 미국 에너지국의 2010년 희토류 생산량 예측치는 12만 7,315톤.  
<sup>8</sup> European Commission (200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Raw materials initiative-Meeting our critical needs for growth and jobs in Europe.







우선 EU는 다른 경쟁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 통상정책은 물론 WTO 가입 지원, FTA 체결, 규제 협의체 구성 등의 양자 간 방안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상대국이 통상협의를 위반하거나 이중가격 책정행위가 발각되면 EU는 WTO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EU는 지속 가능한 역내 원자재 공급원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EU는 원자재 발견에서 생산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개발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회원국 정부가 광물자원 탐사와 채굴에 대한 행정·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더불어 각 회원국 정부가 지질조사 결과를 국토 계획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매장된 광물에 대한 지식 베이스를 늘려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EU는 2009년에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07~2013년)<sup>9</sup> 프로젝트 중 하나로 프로마인(ProMine)을 출범시켰다. 1,700만 유로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EU 역내에 금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장된 금속의 가치를 분석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sup>10</sup>

마지막으로 EU는 원자재 효율성 제고, 대체 원자재 개발, 금속 재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가 생산한 금속 중 재활용 금속이 사용된 비중은 40~60%로 지난 10여 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과 2008년 사이 EU의 재활용 비철금속과 귀금속 수입량은 40% 감소한 반면, 수출량은 125% 증가하여 역내 재활용 금속 가격이 증가하였다. 그 주된 원인으로 EU의 강력한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수출이 허용되지 않은 폐

#### ★ 금속과 희토류 자원 순환분야 기술 국제비교

자원	구분	일본	미국	EU	중국	한국
금속	연구	◎ ↗	X ↘	X →	X →	○ →
	기술개발	◎ ↗	△ →	△ →	○ ↗	○ →
	산업 기술력	◎ →	○ ↗	○ ↗	△ ↗	◎ ↗
희토류	연구	◎ →	△ ↘	○ ↘	X ↗	X →
	기술개발	◎ →	○ ↘	○ ↘	△ ↗	X →
	산업 기술력	◎ →	○ →	○ →	△ ↗	X →

주: ◎ 매우 발전, ○ 발전, △ 뒤처짐, X 매우 뒤처짐  
최근 추세 ↗ 상향 추세, → 현상유지, ↘ 하향 추세  
자료: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2009),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의 국제비교.

기물 중 상당량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지적되고 있다. EU는 이를 막기 위하여 회원국에게 강력한 폐기물수출입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 실행을 요구하고, 역내 도시광산(urban mine)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발효된 폐전기·전자제품(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처리 지침<sup>11</sup>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찬성 580표, 반대 37표, 기권 22표의 큰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년까지 회원국 내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최소 85%는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고 제품에 따라 50~75%가 재활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2</sup>

<sup>11</sup>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3). Directive 2002/96/EC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sup>12</sup> 2008년에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회수율인 65%보다 강력한 수준이다.(Parliament backs ambitious e-waste policy. (2011. 2. 4.). *Euractiv*.). 2011년 3월 14일에 유럽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65% 제안을 지지하였으나 도입 시기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였던 2016년의 4년 뒤인 2020년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하반기에 유럽의회에서 2차 독회가 열릴 예정이다.

EU는 폐기물 회수율을 늘리는 동시에 금속 재활용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역내 매장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활용 금속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EU의 금속 재활용 연구 수준과 기술개발 수준은 국제적으로 뒤처져 있다.

물론 희토류 재활용 연구역량, 기술개발, 산업 기술 수준은 모두 주요국에 비하여 앞서 있지만, 중국이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우위를 계속 선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재활용 기술과 대체 원자재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늘리고 금속분야 전문가 양성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EU에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가 점차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sup>9</sup>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EU 공동의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범EU 사업으로 제1차 프로그램은 1984년에 시작.

<sup>10</su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2010). Tackling the challenges in commodity markets and on raw materials.





# EU의 기업활동 규제 강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 EU's control over corporate activity and corporations' response

As the Lisbon Treaty came into force in December, 2009, EU's legislative power has been strengthened. The EU has the right to amend legislations in the field of servic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they have now become a part of EU Common Commercial Policy. The corporate sector in Europe sees EU's strengthened role as both an opportunity and a threat. They believe that shifting more power to the EU will reduce the regulation disparity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the common market will be strengthened while improving the corporate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it may incur extra costs as the number of regulations, especially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echnology standardisation, increases. Many experts believe that the benefit of developing a framework to respond to such changes in advance will outweigh the cost. Corporations in the EU should improve their information gathering strategies and expand their lobbying capabilities in order to avoid negative impacts of EU's strengthened role.

###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EU의 법률제정 권한이 대폭 확대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서 EU의 법률 제정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EU만이 법률을 제정하고 가결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은 물론, EU가 우선권<sup>1</sup>을 갖는 공동권한 영역도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에 회원국이 법률제정의 우선권을 갖고 EU는 회원국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권한을 보조, 조정 또는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조권한 영역은 위생 및 보건, 문화, 교육, 스포츠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로 대폭 축소되었다. 특히 그동안 회원국이 협상권한을 갖고 있던 서비스와 외국인투자(FDI) 분야가 EU가 배타적 권한을 갖는 공동통상정책에 편입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EU 회원국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약 80%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앞으로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EU의 법률제정 권한 확대에 대한 한국 재계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다. 우선 기대감을 갖는 이유는 EU의 법률제정이 증가하면 회원국 간의 규정 부조화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단일시장이 강화되어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다.<sup>2</sup> 또한

### ★ 리스본조약상의 EU 법률제정 권한

배타적 권한	공동권한(EU) 회원국	보조권한(회원국) EU
오직 EU만이 법률을 제정하고 가결	EU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회원국이 권한 행사	회원국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U가 회원국의 권한을 보조, 조정 또는 대리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세동맹</li><li>• 경쟁정책</li><li>• 통화정책(유로 지역)</li><li>• 공동어업정책하의 해양생물자원 보호</li><li>• 공동통상정책 (서비스, FDI 포함)</li><li>• EU 담당 분야에서 국제협약 체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역내시장</li><li>• 노동정책</li><li>• 경제사회 결속</li><li>• 농업 및 어업 정책</li><li>• 환경</li><li>• 소비자 보호</li><li>• 운송</li><li>• 범유럽네트워크(TEN)</li><li>• 에너지</li><li>• 자유이동, 사법 및 내무</li><li>• 공공보건 및 공동안전</li><li>• 개발협력 및 국제원조</li><li>• R&amp;D, 우주 개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생 및 보건</li><li>• 산업정책</li><li>• 문화</li><li>• 관광</li><li>• 교육, 직업훈련, 청소년, 스포츠</li><li>• 공공안전</li><li>• 행정 협력</li></ul>

EU 기업은 제3국과의 신속한 투자협정 체결이 가능해져 해외시장 개척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수결제 적용에 따른 의사결정 기간 단축으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반면 EU 법률제정의 증가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

능성은 재제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유럽상공회의소의 추산에 따르면, EU 법률 시행으로 지난 10년간 약 1조 유로(EU GDP의 8.3%)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 밖에 환경규제와 기술표준 강화 등이 예상되며, 유럽의회 주도로 보호주의가 강화될 가능성도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우려된다. 더구나 경기침체와 재정위기에 처한 각 회원국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마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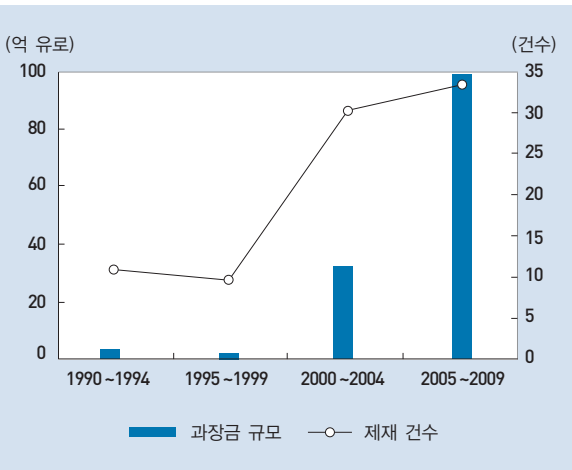
### 수입규제는 감소하는 반면 경쟁법 규제는 강화 추세

EU는 불공정무역 관행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동원 가능한 주요 규제수단이다. 다행스럽게도 EU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감소 추세다. 1990년대에 연 2건이던 규제건수가 2000년대 들어 연 0.7건으로 감소하였다. 물량 위주 수출전략 탈피, 국내외 가격 차 축소, 수입규제 대응 노하우 축적 등을 규제건수의 감소 이유로 들 수 있다. 한-EU FTA 협정을 통해 무역구제제도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무역규제의 사전예방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들로 인해 최근 동반규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경쟁법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EU 집행위원회는 자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법을 엄격히 집행하기로 유명하다. 카르텔(가격담합),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 기업 M&A 등에 대해 강경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의 경쟁법 제재건수와 과징금 규모가 급증하였는데, 카르텔 제재건수는 2005~2009년 동안에 33건, 과징금 액수는 98억 유로로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쟁법 규제대상에는 유럽 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도 포함된다. 프랑스의 생고뱅과 GDF-수에즈는 카르텔을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

### ★ 카르텔 과징금 규모 및 제재 건수 추이



주: 2009년 11월 11일 기준  
자료: EU 경쟁담당 집행위원회 DB.

국의 인텔은 사상 최고액인 10억 6,000만 유로를, 마이크로소프트(MS)는 9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2009년 12월 LCD 담합 사건<sup>3</sup>을 비롯하여 총 4개 사안에 대하여 4억 3,442만 유로(약 6,474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하였다.

앞으로 유럽 경쟁 당국은 경쟁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의회는 카르텔 방지를 위하여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국기업은 이에 대해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통한 절세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EU 회원국은 재정건전화 문제를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 억제와 더불어 세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추가

<sup>3</sup> EU 집행위원회는 6개 LCD제조사가 지난 4년여 동안 카르텔을 유지해 온 혐의에 대해 총 6억 4,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중 LG 디스플레이는 2억1,500만 유로(약 3,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전자는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여 과징금을 전부 면제받았다. EU는 부과한 과징금에 휴대전화용 LCD 스크린에 대한 담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 ★ 주요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 사례

해당기업	연도	사유	벌금(유로)
MS	2008	라이선스 로열티 관련 불공정거래	8.99억
생고뱅	2008	자동차용 유리 가격담합	8.96억
인텔	2009	CPU 시장 불공정거래	10.60억
MS	2009	컴퓨터 운영체제시장 불공정거래	웹 브라우저 선택자유 보장
GDF 수에즈	2009	가스 가격담합	5.53억
티센크루프	2009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가격담합	4.79억
LG 디스플레이 필립스 등	2009	LCD 패널 가격담합 협의	6.5억

세원 발굴이 시급한 각국 정부로서는 지하경제 근절과 다국적기업의 탈세행위를 찾기 위해 조사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 제품 및 기후변화 관련 환경규제도 강화

제품의 환경규제도 대폭 강화되고 있고, 규제대상도 일부 특정 품목이 아닌 전 제품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규제분야도 폐전자제품 등의 재활용에서 벗어나 유해물질 규제는 물론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구온난화 방지와 저(低)탄소경제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집행위원으로 코니 헤데가드(Connie Hedegaard)를 신규 임명하는 등 기후변화 관련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탄소세(Carbon Tax) 부과와 함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sup>4</sup> 국제표준화도 추진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앞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재활용 비용으로 2009년에 408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2014년에는 3.6배 증가한 1,46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sup>4</sup>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사람의 활동 시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여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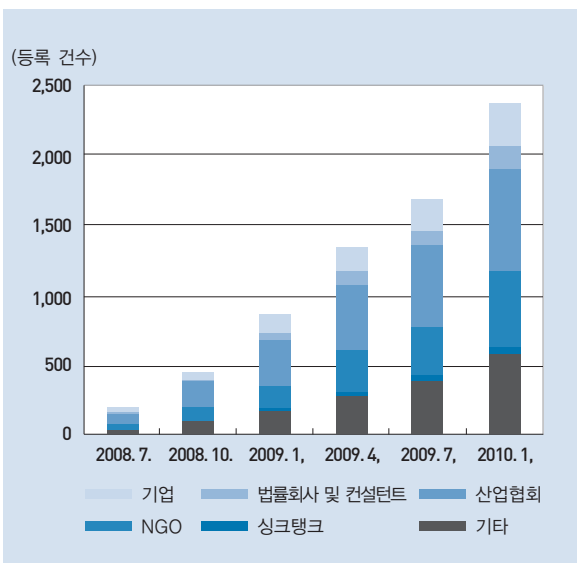
## ★ 제품 환경규제와 기후변화 관련 규제

제품 환경규제	기후변화 관련 규제
재활용 (폐전자제품 처리 지침: WEEE)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활성화 (Cap & Trade)
유해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지침: RoHS, REACH 등)	탄소세(Carbon Tax) 부과
에너지 (친환경설계 의무 지침: EuP, ErP)	탄소발자국 국제표준화 (Carbon Footprint)

## 선진기업은 규제 강화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

EU의 법률제정 권한 확대로 인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U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대상이 되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가보다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은 EU 현지에서 정보수집과 로비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는데, 특히 경쟁법, 환경정책, 에너지,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세금

## ★ 브뤼셀에서 활동 중인 로비조직 등록



자료: EU Register for interest representative.

## ★ 로비조직 등록 기업 현황

구분	국가	기업 수	주요 기업
EU	독일	57	알리안츠, 지멘스, SAP, 폭스바겐
	프랑스	48	BNP 파리바, 로레알, 르노
	이탈리아	27	피아트, 피렐리, 에넬, 유니크레디트
	영국	23	BP,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푸르덴셜
非EU	미국	55	코카콜라, GE, HP, 인텔, MS, 모토로라, 나이키, 애플
	일본	8	히타치, 소니, 파나소닉, 애플, 도요타, 브리지스톤
	스위스	8	ABB, 로슈, 노바티스, 스위치

등의 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많은 글로벌기업이 벨기에 브뤼셀에 대EU 로비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앞으로 이러한 로비조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말 현재 브뤼셀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로비조직은 약 2,200개, 로비스트 수는 적어도 약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로비조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성을 살펴보면 산업협회, NGO, 다국적기업, 법률회사 등의 순이다.

로비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등록된 320개 기업의 국적을 살펴보면, 독일(57개), 프랑스(48개), 미국(55개), 일본(8개), 스위스(8개) 등이다. 이 수치는 등록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조직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소니, 도요타, 히타치, 애플유럽, 재팬 토바코인터내셔널 같은 개별 기업은 물론 일본자동차공업협회와 70여 개 회원을 대표하는 유럽일본상

공회의소(JBCE)도 브뤼셀을 거점으로 왕성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국기업으로는 현대차가 유일하게 브뤼셀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EU와의 관계 강화에 나설 필요

한국기업은 수출과 관련한 반덤핑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단편적인 로비활동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활동과 관련된 EU의 규제에 대비하는 로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는 독점적 지위 남용, 카르텔, 합병규제(Merger Control), 특허 위반, 이전가격 등의 측면에서 기업활동이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 및 자동차 업계의 높아진 위상과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면 EU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산업계는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과 로비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산업계는 1995년 이래 매년 양측에서 50명의 재계 지도자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EU-일본 재계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 산업계는 EU 차원의 대화 채널이 전무한 실정이다. 우선 한미 재계회의와 유사한 EU 차원의 재계회의 발족부터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한-EU 관계를 강화하는 데는 기업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대EU 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는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법률제정 권한이 대폭 강화된 유럽의회와의 교류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긴축전쟁의 사회적 충격: 빈부격차 심화와 계층갈등

## Social impacts of fiscal consolidation and widening income disparity in EU

The fiscal problem in the EU has not been solved yet and the side effects of fiscal consolidation are arising in EU member countries. Workers, pensioners, and students in Europe are opposing to their governments' decisions to reduce the size of their public services and welfare benefits. Some see Europe's fiscal consolidation process as the beginning of a new class war. Especially, the youth and women are expected to suffer more from the policy shift. Governments expect that reducing spending will improve their fiscal position, yet it is possible that it will lead to lower economic growth and higher unemployment, which will in turn lead to a rise in public debt.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fiscal consolidation in Europe will affect the fundamentals of its social model that has been emphasising on social equality and solidarity, but the rapid consolidation process is expected to deepen EU's social problems for now.

### 유럽 재정위기로 긴축정책 시행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초부터 일부 유로 지역 국가의 재정위기가 국가부채 문제로 발전하면서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최근 포르투갈에서 정부 재정 긴축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후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유로 지역의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긴축 문제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IMF의 구제금융은 민영화, 복지 축소, 임금 감축 등 고강도의 재정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긴축은 소득 감소와 복지 축소를 가져오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기회와 교육수준의 저하, 실업 및 고용 가능성 악화, 공공보건 악화, 사회적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정치·사회적 불안 등 커다란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EU의 주변부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핵심부 국가들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위기와 긴축정책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가 공공사회 서비스와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축소하자, 근로자와 연금수급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청년 및 대학생, 사회운동가 등이 긴축정책에 반대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0년에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총파업이 발생하였다.

###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의 확산

유럽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긴축전쟁(the war of austerity)'이 벌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넘게 노동운동과 진보세력의 노력으로 성취한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연금, 복지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유럽노조총연맹(ETUC: The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유럽 주요 도시에서 긴축반대시위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수많은 긴축 반대 캠페인 그룹과 사회운동가들도 공공지출 삭감 반대시위에 동참하여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과 국제 투자자들의 무책임과 이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데 대하여 항의하였다.

유로 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2010년 5월 IMF-EU와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총파업이 발생하였다. 그 후에도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계획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지난 2월에도 수도 아테네에서 25만여 명이 참가한 시위가 있었다. 그리스 의회는 2010년 5월 연금 감축과 공공부문 근

로자의 임금 삭감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하여 노동자의 소득은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과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일반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그리스에서 시작된 시위와 파업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었다.

영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부채가 GDP 대비 44.5%(2007년)에서 68.2%(2009년)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5월 총선의 승리로 등장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연간 1,500억 파운드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한편, 공공부문 일자리를 축소하고 세금을 늘리는 등의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노인센터, 청소년센터, 공공수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을 폐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30만 개가 감소하면서 1994년 이래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등록금이 연간 3,375파운드에서 9,000파운드로 인상되자, 영국 학생 수만 명은 2010년 11월과 12월 연립정부의 등록금 인상과 대학보조금 삭감에 항의하여 25년 만에 가장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청년들의 시위뿐만 아니라 영국의 많은 대도시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동맹이 결성되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은행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국가부채를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줄여 갚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저항하고 있다. 2011년 3월 26일 런던에서는 50여만 명의 시민이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시위행진을 벌였다. 거의 모든 노조 지부가 참가하였고, 긴축반대 활동가, 연금 수령자, 학생과 실업자 등이 행진에 참여하였다. 프랑스에서도 2010년 10월에 연금법 개혁 반대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1995년 이래 가장 강력하였다.

유로 지역 국가 중 두 번째로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

랜드에서는 2010년 11월 10만여 명이 수도에서 정부의 긴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퇴직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임금을 13%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였다. 구직수당과 아동수당, 연금이 삭감되고 공공서비스의 축소 및 민영화로 공공부문 일자리 2만 5,000여 개가 감소하면서 공공부문 및 일반 근로자, 실업자, 연금생활자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긴축은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축소에 집중되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포르투갈에서는 2010년 11월 24일 역사상 최대의 총파업이 발생하였다. 전체 노동자의 80%에 달하는 300만 명이 참가한 긴축반대 파업은 공공부문 임금 5% 삭감, 연금 동결,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담은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의 2011년 예산안에 반대한 것이다. 지난 3월에도 포르투갈의 주요 도시에서 30여 만 명이 긴축반대 시위를 벌였다. 스페인에서도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퇴직연령 연장, 민영화 등을 반대하는 파업이 발생하였다. 스페인의 20%가 넘는 실업률에 더해 정부지출 삭감으로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 사회적 약자의 삶을 위협하는 긴축정책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유럽의 긴축정책을 '계급전쟁(class war)'으로 보고 있다.<sup>1</sup> 복지정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유럽 국가는 GDP의 20~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다. 사회보장비란 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 공공부조, 병가 및 장애 수당, 아동 및 가족 수당, 출산수당 등을 포함하는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을 말한다. 유럽 국가의 사회보

<sup>1</sup> Spending review reaction: These cuts will cause real pain and anxiety for millions of people. (2010. 10. 20.), *The Guardian*.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10/oct/20/spending-review-reaction-cuts-pain>>





### ★ 2008년 유럽 주요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단위: %)

국가	GDP 대비 지출
영국	23.7
프랑스	30.8
독일	27.8
이탈리아	27.8
그리스	26.0
포르투갈	24.3
스페인	22.7
아일랜드	22.1

자료: Eurostat,

장비 지출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연금 및 실업급여의 감축, 공공부조 지원액의 축소, 다양한 수당의 감축은 상당한 정도의 즉각적인 소득 감소를 의미하고, 결국 주로 정부의 사회보장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에 대한 증세가 없는 긴축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격이고, 이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영국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3배 가까이 인상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학 입학에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계층 이동이 극히 제한된 영국사회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큰 집단에 속해 있다. 평등부 장관(Minister for Equality)의 의뢰로 존 힐스 교수 팀이 작성한 계급 격차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서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소득 불평등과 계급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이 연구는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급에 의해 분열된 사회임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현대적 복지국가

<sup>2</sup> Hills, J., et al. (2010). An Anatomy of Economic Inequality in the UK: Report of the National Equality Panel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Repor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 2011년 25세 이하 유로 지역 청년실업률

(단위: %)

국가	실업률
스페인	43.5
그리스	36.1
아일랜드	31.9
이탈리아	28.1
포르투갈	21.3

자료: Eurostat,

를 설계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더 이상 영국을 상징할 수 없게 되었다.

긴축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의 공통점은 복지국가와 평등을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다. 영국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고, 복지 감축, 민영화 등을 추진하면서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시대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 그리스의 시위 군중은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연금 축소, 민간부문 해고 완화, 민영화,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은 그리스 국민을 보호하기보다 유럽 은행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역사상 가장 가혹한 세금 인상과 긴축재정을 실행하면서 다수 국민의 삶과 사회적 권리,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있다. 포르투갈도 구제금융에 따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면 연금생활자나 근로자의 삶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다.

긴축으로 인한 청년층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매우 높다. 긴축에 항의하는 시위에 청년층이 대거 참여한 것도 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긴축정책은 교육비 인상과 일자리 감축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청년층의 빈곤문제와 세대 간 갈등까지 야기하게 된다.

긴축정책은 여성과 남성 간 젠더 불평등도 심화시

키고 있다.<sup>3</sup> 보육, 노인 돌보기 등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축소는 여성의 일자리를 줄이는 동시에 보살핌 노동의 가사화로 여성의 비임금 노동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탈규제로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이 높은 상태에서 노동시장 참여 기회의 축소는 경제적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국가의 복지급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급여 축소는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 핵심은 분배와 복지의 문제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긴축정책은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문제는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개선되기 어렵고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져 실업을 악화시키고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현상에 대해 폴 크루그먼 교수는 ‘긴축신화(myths of austerity)’라고 명명하였다.

민간부문의 성장이 없는 긴축정책은 디플레이션을 초래해 오히려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누구를 위한 긴축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더욱 가혹한 긴축을 해야 하며, 이는 고용과 성장을 둔화시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외부자(outsiders)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빈부격차와 계층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유발하여 더욱 경제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인 긴축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부 유럽이 유독 심각하게 재정위기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경제체제와 복지체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비효율과 경직성은 포

<sup>3</sup> Austerity Promotes Gender Hierarchies. (2011. 2. 22.). *Social Europe Journal*. <<http://www.social-europe.eu/2011/02/austerity-promotes-gender-hierarchies/>>

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의 특징이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정긴축만으로는 어려우며 경제와 사회 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 즉 개혁과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단시간에 이를 수 없고 신뢰와 사회자본을 포함한 공식·비공식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성과 효율성, 평등성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에 비추어볼 때 노사정, 비정규직, 실업자 등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불공정한 세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르투갈에서 2011년 3월 23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중도좌파 정부가 요청한 긴축안이 중도우파 야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추가 증세와 복지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 긴축안을 부결시킨 중도우파 야당은 중도좌파 정부의 긴축안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타격을 입힌다며 거부하였다. 긴축안 부결 전 2주 동안 포르투갈에서는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긴축안 부결 직후 금융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말았다. 포르투갈의 지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평한 개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이루었더라면 국민은 구제금융으로 인한 더욱 가혹한 긴축정책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축반대 시위와 파업의 핵심은 사회적 부에 대한 분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정의의를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은 부와 정치권력의 재분배에 대한 강력한 요구다. 국민이 정부의 긴축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복지와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로 복지국가와 평등수준이 크게 약화되었다. 사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1990년대부터 또는 2000년대 들어 복지 및 노동 개혁으로 복지를 줄여왔다. 독일에서도 복지개혁을 통하여 실업수당과 빈곤층 공공부조를 통





# 유럽 재정위기 국가의 부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

## A possible solution to Europe's debt crisis

In March, the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published a report “Can the eurozone countries still live together happily ever after?” This paper suggests that a European Debt Agency should be created within the EMU to buy the bonds of fiscally weak countries through reverse auction mechanism. Each of eurozone members that wishes to sell its newly issued bonds to the EDA and has signed buyback contracts with the holders of the stock of its bonds that are contingent on the success of its participation in the reverse auction simultaneously sets the minimum price at which it is offering to sell those bonds and the quantity. The interesting part of this suggestion is that it does not limit the EMU countries to converting only some of their securities into Eurobonds and require them to hold their remaining securities in the old national form. Even if this suggestion does not end up being a realistic solution, it is still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easons behind it.

유럽정책연구센터(CEPS)는 2011년 3월 ‘유로 지역 국가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럽채무국(EDA: European Debt Agency)을 신설해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역경매 메커니즘(reverse auction mechanism)을 통해 매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럽 재정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그중에서도 유럽금융안정기구(EFSF)와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EFSM)은 일시적 위기에 빠진 유로 지역 국가에 구제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가 근접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소방수’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2011년 1월에는 아일랜드 구제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해 유럽금융안정기구와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고, 그 일환으로 50억 유로 어치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2013년을 끝으로 기한이 만료되는 유럽금융안정기구를 대체할 조직에 대한 논의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보고서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럽채무국(EDA)을 신설해 회원국의 국채를 사들이고,

유로 지역의 회원국이 공동으로 보증을 선 EDA 명의의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10년 12월 장클로드 융커 유로지역재무장관회의 의장과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 특별 기고를 통해 EDA의 신설과 유로본드 발행을 주장하였다.<sup>1</sup> 학자들도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EDA의 재원 마련과 채권의 금리를 계산하는 각종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보고서가 제시한 방법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EDA가 회원국의 국채를 역경매 방식을 통해 흡수한다는 점이다. 역경매 방식이란 사려는 쪽이 아니라 팔려는 쪽, 즉 각국이 자신들의 국채를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방식이다. 즉 EDA가 국채를 매입할 최대 수요량과 최대 금리를 정해 경매를 시작하면 유럽 각국은 새롭게 발행한 자국의 국채를 팔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EDA는 이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국가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다. 이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는 국채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낮은 금리를 제시할 것이며, 반대로 시장을 통해 충분히 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 국가는 역경매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EDA는 재정위기 회원

<sup>1</sup> Juncker, J-C. & Tremonti, G. (2010. 12. 5.). E-bonds would end the crisis. *Financial Times*.

합하고 지원 금액을 대폭 축소한 제4차 하르츠법(Hartz IV)과 정년 연장 조치가 이루어졌다. 소득에 연계된 실업수당 수혜자격도 크게 강화하였다. 복지를 대폭 축소한 하르츠법은 2010년 2월 위헌 판정을 받았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이 너무 적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존엄권을 침해한다”며 2010년 말까지 개정을 요구하였다.

유럽의 긴축정책이 사회적 평등과 연대를 강조하는 전후 복지국가시스템, 즉 유럽 사회모델의 해체를 가져올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EU가 요구하는 급진적인 긴축정책은 노동계층보다 부유층의 이익을 보장하여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시위에 참여한 유럽 시민들이 정부가 탈세문제만 잘 대처해도 공공지출 삭감의 필요성은 크게 줄 것이

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EU의 긴축정책은 재정위기 국가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켜 유로 지역, 나아가 EU 내 부국과 빈국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유럽통합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을 비롯한 부유한 국가들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최상위 1%의 글로벌 파워엘리트와 슈퍼클래스(superclass)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여 2007년 이들 국가의 소득불평등은 대공황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시카고대학교 라구람 라잔 교수의 소득불평등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는 주장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좌파 정부가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이러니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 제2회 EU 비즈니스 심포지엄 The 2<sup>nd</sup> EU Business Symposium

On March 2, the 2<sup>nd</sup> EU Business Symposium on the “Changes in the Economic Climat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Korean Economy” was held at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symposium was hosted by the Yonsei-SERI EU Centre and it was sponsored by the EU Commission. At the symposium, the current state of the EU economy and the recovery process of the European industry and financial sectors were examined. The speakers discussed on whether the European economy was on its path towards a full recovery, or if certain obstacles were delaying the process. Participants then proceeded to discuss the impact of the newly ratified Korea-EU FTA and its possible impact on Korea and the EU. Ahn Ho Young, Designated Ambassador to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European Union, delivered a presentation on the “Future of Korea-EU relations after the FTA” and Kim Pil Hun, senior researcher at the Kore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delivered a present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and Projections”. In the last section, Yun Jae Chun, director of the Regional research team at KOTRA, delivered a presentation on “Changes in the commercial condition in Europe and Korean firms’ responses.” The event was moderated by the SERI.

연세-SERI EU 센터는 2011년 3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유럽 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제2회 EU 비즈니스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첫 발표자였던 안호영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EU의 경제·정치적 의미를 설명하며 FTA가 한국과 EU의 관계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전망하였다. 이어서 김필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고, 윤재천 KOTRA 구미 팀장은 EU와의 관계 변화가 한국 산업계에 미칠 파급과 한국기업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정민경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국의 채권을 ‘혈값이 아닌’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2010년 유로 지역 국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84% 정도이므로, EDA가 회원국 GDP의 약 60% 정도의 국채를 흡수해 유로본드로 발행하게 되면, 각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잠재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60%는 EU의 「안정 및 성장 협정(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위반하지 않는 수치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이를 시뮬레이션해보면, EDA는 유로 지역 국가 중 AAA 신용등급 이하의 국가가 보유한 2010년 말 기준의 국채 전량과 2011년과 2012년에 새롭게 발행할 국채를 모두 흡수할 수 있다.

즉 기존에 제시된 방식이 유로 지역 국가의 국채 중 비교적 안정적인 일부(블루 본드)만을 매입하고, 나머지 위험 채권(레드 본드)은 남겨두었던 데 반해, 역경매 방식은 문제가 되는 회원국의 국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동화적인 정책’들이 유럽통합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지만, 보고서에 제시된 방법은 매우 현실적으로 유로 지역 국가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의 제목 그대로 유로 지역 국가들이 지속적으로(앞으로도) 공존하여(함께) 상이한 이해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행복하게)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우선 독일 같은 재정안정 국가가 이 방법에 참여해야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채를 EDA에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파는 것이 아닌데도, 유로 본드에 공동 보증을 서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EDA가 재정위기 국가의 채권을 흡수함으로써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중앙은행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고, 채권 발행에서 얻은 이윤으로 회원국의 인프라와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독일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 등 경제외적인 요소를 유인책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EDA가 재정 문제국의 채권을 계속 매입하면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현상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 제시한 재정안정 국가의 리더십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재정안정 국가가 EDA에 참여해 유로본드를 공동으로 보증하는 한, 재정위기 국가는 거시적인 재정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에 역경매라는 특성상 재정위기 국가가 개혁을 등한시하면 더욱 급하게 국채를 처리해야 될 상황에 놓이므로 EDA에 더 낮은 금리로 국채를 넘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서라도 재정위기 국가는 재정안정 국가의 지도 아래 개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가 제시한 이러한 방안은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여러 대안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주고 있다. 비록 이 방안 역시 이론적인 제안에 그치고 있지만, 왜 이러한 방법이 제시되었는지 그 의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Messori, M. (2011). Can the eurozone countries still live together happily ever after? (CEPS Policy Briefs No. 239). CEPS.) ★



## 제7회 브뤼셀 포럼 개최 The 7<sup>th</sup> Brussels Forum

Yonsei-SERI EU Centre hosted the 7<sup>th</sup> Brussels Forum on February 25, 2011, under the title "People to peopl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U." Professor Park, Young-Ryeol, Director of the Yonsei-SERI EU Centre, gave a presentation on the topic and he emphasis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EU is important and beneficial for both parties. Participants discussed on possible ways to improve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EU and they agreed that the cultural relations and human network between two economies had to be improved. They also agreed that Korea should collaborate with the EU in the field of academic research and to share valuable information. They asked the EU Centre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o contribute in improving the Korea-EU relations.

연세-SERI EU 센터는 2011년 2월 25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People to peopl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U'라는 주제로 제7회 브뤼셀 포럼을 개최하였다. 연세-SERI EU 센터 소장인 연세대학교 박영렬 교수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인적 교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한국과 EU의 교류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참석자들은 경제교류에 비해 한-EU 간의 문화적·인적 교류가 아직 미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학생과 연구진들의 폭넓은 교류가 무역뿐만 아니라 한국과 EU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나아가 EU 센터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국과 EU 교류 발전에 이바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2회 EU 설문조사 The 2<sup>nd</sup> Survey on the EU

The Yonsei-SERI EU Centre conducted a survey on the EU to measure the awareness of the EU among Koreans.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Yonseri.org website, the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Website, and e-mails. Over the 16 days during which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8 to March, 16), we received 1,834 responses and participants were from diverse professions.

In the first question regarding basic interest levels on the EU,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responded "Do not know much about the EU" was reduced by 5.3% compared to last year, while those who responded "Considerable Knowledge of the EU" and "Basic Knowledge of the EU" were increased by 0.9% and 4.4% respectively. Also, positive responses to the question "Would you actively read EU-related articles in the newspaper?" were increased by 7% compared to last year.

For the question measuring the accuracy of respondents' knowledge on the EU,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accurately responded to the question on the number of EU member states was increased by 8.8% compared to last year. However, over 40% of people responded that they were not aware of the usage of a single currency or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revealing that people still lacked in-depth knowledge on the EU.

For the question asking about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in Korea-EU relations, over 80%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business relations", demonstrating the expectation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upcoming age of Korea-EU FTA.

For the question asking which foreign country is the most important to Korea,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said "USA" was reduced by 20% while those who said "China" was increased by 30%. Only 2.1% answered that the "EU" was the most important country.

However, for the question asking if they were interested in receiving information on the EU provided by the EU Centre, 18.9% answered "Very much interested" and 47.5% answered "interested", revealing that many participants wished to hav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EU.

In the free response section asking about the most pressing research topic on the EU, 20% responded "Korea-EU FTA and related clauses." Other interests included "EU Integration" and "Green Growth."

The EU Centre will use the results of this survey to continue promoting awareness of the EU to a wide audience by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and activities.



## 제2회 EU 설문조사 The 2<sup>nd</sup> Survey on the EU

연세-SERI EU 센터는 EU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EU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EU 센터 홈페이지와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회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2월 말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834명이 참여하였다.

EU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2010년에 비해 “EU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5.3%가량 감소하였으며, “상당히 잘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는 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각각 0.9%와 4.4% 상승하였다. 언론에 실린 “EU 관련 기사를 읽어보겠다”라고 우호적으로 대답한 답변도 2010년에 비해 소폭(7%가량) 증가하였다.

EU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묻는 질문 중 EU 회원국이 27개국이라고 정확히 대답한 비율은 2010년에 비해 늘어났지만(8.8% 늘어난 26.1%), 유로화 사용 여부나 리스본조약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에는 40% 이상이 “잘 모른다”라고 대답해 아직 EU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EU가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80% 이상이 “비즈니스 관계”라고 답해

한-EU FTA 시대를 앞두고 EU를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을 답한 비율은 2010년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데 반해, 중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꼽은 비율은 29.7%나 증가하였다. EU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1%에 그쳤다.

EU 센터가 제공하는 EU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각각 18.9%와 47.5%를 차지해 많은 응답자가 EU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시급한 EU 관련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고 한 질문에서는 “한-EU FTA와 관련 규정”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20%를 차지하였다. 이 밖에 EU의 통합(9.2%)과 녹색 성장(3.0%)에 관심을 보인 응답자도 많았다.

EU 센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EU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EU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계 각층에 대한 맞춤형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